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사회공공성강화 · 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교육지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www.nodong.org | 02-2670-9120 | 2025년 6월 26일

■ 여전한 내란·극우세력, 불안정한 경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과 내란 탓에 치른 6월 3일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728만7513표로 최다 득표했다(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를 득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한 정당임에도 예상 이상의 표를 가져갔다. 갈라치기와 혐오로 대선판을 흔들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8.34%)와 합하면 49.49%로 극우 보수 기득권 세력이 굳건함을 보여주었다.

내란 세력의 견재함, 극우세력의 힘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될 것을 암시한다.

한편,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전쟁, 3년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폭격과 미국의 이란 공격 등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년 동월대비 5월 대미 수출은 급감(자동차 -32.0%, 부품 -17.6%, 철강 -20.6%)했고, 이란의 호르무스 봉쇄 의결

(6월 22일)이 실제로 행해지면 석유 운반에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거센 리쇼어링(Reshoring,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 또는 생산시설을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는 것) 정책 여파로 우리나라는 국내공장 축소와 고용감소 현상까지 일어나는 중이다.

현대차는 미국에 210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1공장 전기차 라인 생산을 중단하며 상반기에 벌써 세 번 휴업했다. 삼성전자는 370억 달러를 들여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한국지엠은 5월 말 직영 서비스센터 9개 및 부평공장 일부 생산시설과 토지를 매각한다는데, 미국에서는 약 9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안으로는 내란·극우 세력 준동이 밖으로는 전쟁, 관세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 이재명 정부, 윤의 ‘노동’ 지워야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3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사회대개혁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멋대로, 기업 입맛대로 망쳐놓은 노동정책을 바로 잡고, 광장에서 모은 사회대개혁 의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2천 만이 넘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고·플랫폼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무상의료·무상교육 포함 사회공공성 강화로 국가책임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성평등민주주의 확대 및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한 경제민주화 등의 국정과제를 요구했다. 이는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4월 4일 윤석열 파면의 123일 동안 광장에 올려 퍼진 의제이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가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삼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마중물이 바로 7월 총파업·총력 투쟁이다. **7월 투쟁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노동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만들어가는 투쟁이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대개혁 의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도록 쟁점화, 여론화하는 투쟁이다.

■ ‘노동이 곧 민생’이다

① 온전한 노조법 2·3조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 정의 개정(2조 1항)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2조 2항) △노동쟁의 정의 및 대상 확대(2조 5항) △노동쟁의 손해배상책임 제한(3조) 이다.

윤석열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권을 남발했고,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음은 대법원 고등법원 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 그렇지만 단지 법 조항에 관련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취약파악해 온 원청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방해한 장애물이 사라졌다. 남은 일은 빠른 법 통과와 공포 및 시행이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 노조법 2조 1항: 노동자 정의 개정,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
- 노조법 2조 2항: 사용자 정의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사내하청 조항 추가)
- 노조법 2조 5항: 노동쟁의 정의 확대하여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조법 3조: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총력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책임 명확화 등 온전한 노조법 2·3조 쟁취를 위해 광장의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② 노정교섭 구축 및 제도화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게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집권 초부터 노동을 적대했던 윤석열 정부의 각종 노동악법 정책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은 노동계와의 소통이다. 대통령실·국무총리실·노동부 등에 민주노총과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노정 정례협의체를 추진해 노동존중이 미사여구가 아닌 현실에서 움직여야 한다.

김형수 지회장(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은 한화 본사 앞 철탑에서 97일 만에 땅을 디뎠다. 박정혜 지회장(금속노조 한국오퍼칼하이테크)이 불탄 공장 옥상에서 530일, 고진수 지부장(서비스연맹 세종호텔)이 명동 한가운데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 위에서 13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다. 먹튀 투기자본 MBK와 싸우는 홈플러스 노동자도 있다.

이들 노동자의 요구는 단 하나.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것이다. 노정교섭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노총과 정부와의 중앙 노정 교섭 체계 및 산별

노정 교섭체계 구축과 대 국회 사업 강화로 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악법 폐기, 노동존중 정책을 요구하는 7월 총파업을 조직하자.

③ 내란 정권의 반노동 정책 폐기

윤석열 정부는 여당 국회의원의 수적 열세로 법 개정 대신 시행령과 행정지침 등의 제도를 악용해 노동 탄압에 앞장섰다.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소득세법 시행령) △노조법에 따른 징의행위를 사회재난으로 규정(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화물노동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조 활동 개입(건설노조 탄압) △타임오프 기획 감독으로 노조 활동 무력화 등 노동탄압을 위해서는 앞뒤를 가리지 않았다.

새 정부는 장관 임명 마무리와 함께 윤석열이 반노동 정책 창구로 활용한 시행령 개정은 물론 노동자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타임오프, 회계공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 탄압 등 윤석열 정부가 휘둘러댄 노동 탄압의 도구를 빠르게 정비할 때다. 노동존중으로 가는 길목 길목마다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은 신속하게 추진시켜 조금은 더 일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④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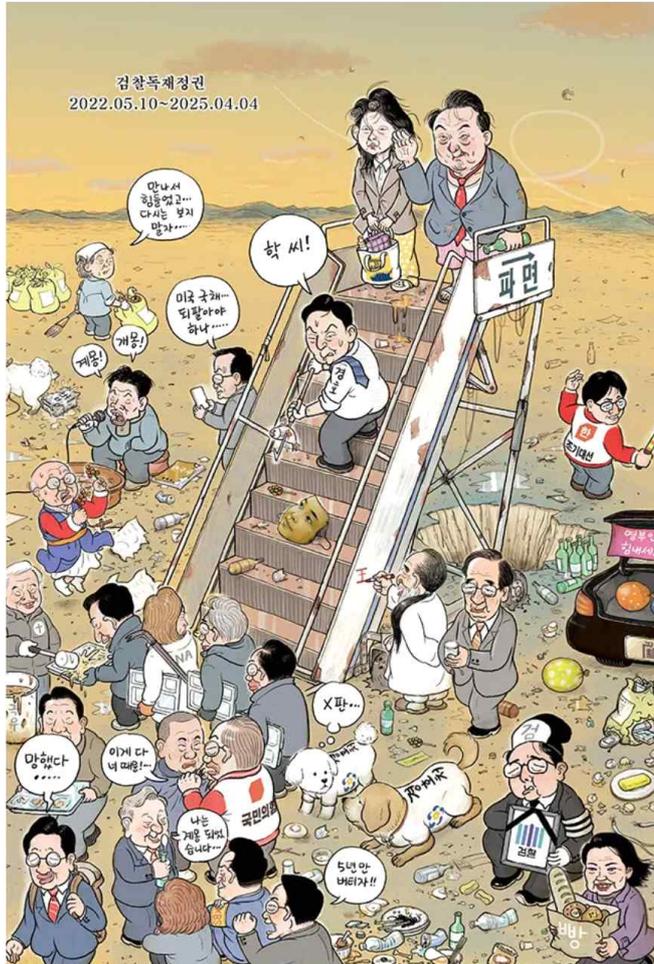
감옥에 있어야 할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한다. 대선에 패배한 뒤 국민의힘은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을 반대했다는 희한한 평가를 해댄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 정당으로 활약해 온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해 진정한 사과 없이 당권 경쟁에만 열심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연이은 만남 속에 협치를 얘기한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두둔했다. 전광훈 집회, 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편을 들었다. 그들은 처벌과 단죄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님을 민주당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광장의 힘으로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은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했다고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및 내란 동조 세력을 엄중하게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의 진짜 시작이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세력을 완전하게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현장과 광장이 만드는 총파업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막고 파면을 요구하는 광장에서 노동자·시민이 만났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2025년 4월 5일 한겨레신문 그림판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어떤 고통으로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모여서 토론했고 다음 정부가 받아야 할 사회대개혁 의제를 촘촘하게 엮었다.

노동자·시민이 만든 사회대개혁 의제에는 대한민국을 △차별과 혐오 없는 안전한 사회 △일하는 노동자 누구에게나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 △직접 민주주의가 더욱 폭넓어진 사회 △개헌으로 주권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는 사회로 나갈 방향과 세부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의 노동의제와 광장의 사회대개혁 의제는 7월 총파업 총력투쟁의 주요한 요구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이 얘기하는 **빛의 혁명 완수는 사회대개혁 의제를 국정 운영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 실현하는 것이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이라고 했다.

7월 총파업·총력 투쟁은 아직 땅으로 발을 못 디딘 노동자, 악덕 투기자본 MBK에 맞서 생존권 투쟁 중인 홈플러스 노동자, 거리로 나와 곡기를 끊은 지 한 달이 되는 MG손보 노동자...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투쟁이다.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향해 광장의 응원봉 동지들과 함께 힘찬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투쟁을 전개하자. 